인하대논술

인문계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2
문항 1 2
문항 2 7

2025학년도 인문계열 12
문항 1 12
문항 2 18

2024학년도 인문계열 22
문항 1 22
문항 2 28

2026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

[문항 1] “인공지능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공정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지지와 반론의 논거를 제시문 (가)~(마)를 모두 활용하여 작성하시오. 또한 반론에 대해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며 재반론하시오(단, 제시문 (가)는 지지와 반론에 모두 활용할 것).

(1,000자±100자, 60점)

[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추론·인식을 계산적 절차로 재현해 정보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순수한 연산 구조를 바탕으로 작동하며, 주어진 목표에 맞춰 통계적 패턴을 식별하고 그 결과를 예측치로 제시한다. 이를 구현하는 주요 방법인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법이다.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은 인간이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의 판단을 돕는 기술 장치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의 추세를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대체할 만큼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인공지능이 독자적 판단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판단이 필요한 현실 세계가 희소성의 조건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인간의 이타성은 제한적이기에,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게 되는지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균열과 갈등이 고조되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판단이 공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공정하기 위해선 현실을 왜곡 없이 파악하고, 합당한 기준을 설정하며, 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이해 당사자의 배제이다. 기준을 바꾸면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판단 주체는 그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토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의 참여가 배제될 필요가 있다.

합당한 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책임 부과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판단 주체가 적합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책임 부과 절차는 판단 주체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제재의 본질은 주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벌금을 물리거나 교정시설에 가두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합당하게 설정된 정당한 기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확실히 부과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합당한 기준의 임의적 적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활용

[나]

캐럴(Lewis Carroll)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넌센스 문학 전통을 바탕으로 언어유희와 논리적 전복을 통해 인간 사고의 허술함을 풍자한 작품이다. 이러한 특성은 소설 마지막에 등장하는 재판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이상한 나라의 법정은 넌센스적 요소가 극적으로 펼쳐지는 공간이고, 재판 과정은 임의적 규칙, 즉흥적 결정, 불완전한 정보, 모순된 논리의 연속으로 그려진다. 하트 여왕이 만든 타르트가 사라진 사건이 발생하여, 카드 잭이 범인으로 지목되자 재판이 열리게 된다. 배심원과 증인들은 무질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여왕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끊임없이 “목을 쳐라!”라고 외친다. 증인으로 등장한 하얀 토끼는 엉뚱하게도 앨리스의 신체 크기가 자꾸 바뀐다는 이상한 증언을 한다. 재판장인 왕은 증거를 읽기도 전에 유죄를 선고하려고 하고, 여왕은 선고를 먼저 하고 평결은 나중에 하라고 주장한다. 재판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앨리스에게도 여왕은 “목을 쳐라!”라고 명령하지만, 앨리스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너희는 모두 한 팩의 카드일 뿐이야!”라며 이 재판이 넌센스의 세계임을 지적한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의 재판이 형식적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질서와 모순, 우연한 요소가 끼어드는 상황임을 알아챈 것이다.

인지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카너먼(Daniel Kahneman)은 판단과 의사결정에서의 불합리한 특성을 '노이즈(nois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판단을 내린다고 보며, 이때 생기는 판단의 원치 않는 변동성을 노이즈라고 불렀다. 같은 정보와 조건이 주어져도, 시간, 환경, 감정 상태, 개인적 편향 등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동일한 판단자라 하더라도 시간, 기분, 환경에 따라 같은 사례조차 다르게 판단하는 임의적 변동성을 보인다. 특히 재판, 채용, 의료 진단과 같은 분야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낳는다.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절차, 구조화된 규칙, 일률적 평가 체계 등이 사용되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규칙화하면 상황에 따른 유연한 판단이나 정당한 재량이 발휘되지 못하고, 판단 기준 자체가 설계자의 주관이나 임의적 선택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단의 노이즈는 단순히 오류가 아니라, 인간 판단 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변동성과 한계를 드러내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캐럴의 넌센스적 재판 장면은 이러한 판단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경제 활용

[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세계를 해석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복합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동일한 언어 안에서도 지역·문화·세대·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언어 발화를 둘러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같은 문장도 화자의 의도, 관계의 성격, 분위기, 발화의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오늘 회의 준비는 잘 되어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이 발화는 발화자의 음성, 이전 대화의 흐름,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등의 맥락 속에서 격려가 되기도, 반대로 압박이 되기도 한다. 언어학에서 화용론(Pragmatics)은 이처럼 문장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언어가 실제 사용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기능하는지를 연구한다. 물론 맥락적 이해가 항상 정확하게 잘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해석의 틀이 충돌할 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간극이 생기기도 한다. 오해는 의사소통의 단순한 실패가 아니며,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이 맞닿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언어를 둘러싼 이러한 관점은 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다.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언어의 의미가 단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어가 사용되는 실제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말의 의미는 사전에 적힌 정의가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어낸 규칙과 관습 속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흄(David Hume)은 인간 본성의 여러 성질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공감을 들었는데, 그의 공감 개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류애나 이타심의 형태로 표현되는 감정을 말한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여 자기 안에서 재현하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재현 능력이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인간은 언어의 표면적 의미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안에 담긴 감정·동기·상황을 함께 읽어내고, 이를 통해 공감이라는 심리적 연결을 형성한다.

인간의 우수성은 이러한 맥락적 판단 능력을 언어 자체의 이해를 넘어 폭넓은 사고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말뿐 아니라 목소리의 떨림, 표정, 몸짓, 침묵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까지 결합해 상대방의 상태를 추론한다. 여기에는 과거 경험, 사회적 규범, 관계의 역사 등이 함께 작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논리적 분석을 넘어서는 인간 고유의 통합적 인지 능력에서 나온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단순히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내면적 맥락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하며, 바로 이러한 깊고 넓은 이해 능력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고등학교 국어, 화법과 작문, 윤리와 사상 활용

[라]

일기예보는 뜻밖의 재난을 대비하고, 일상 및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상정보다. 기상청의 예측이 자주 빗나가자, 국내 기상정보를 노르웨이나 미국 등 해외 기상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보는 '기상 망명자'도 생겨났다. 이는 일기예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한국 기상청은 2020년 '수치예보 모델'을 도입하여 일기예보의 부정확성을 줄여서 기후 위기에 전전긍긍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했다. 이 기상예보 장치는 미래의 대기 상태와 움직임을 계산한 값을 활용해 날씨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상청은 이전에는 영국의 통합 모델을 빌려 썼으나 이 예보 장치의 도입을 통해 한국의 지형과 기상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기후 관측과 예보를 실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기상 예측과 예보 적중률이 얼마간 향상되었으나 해당 예보 장치의 제약성을 크게 피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수치예보 모델은 대기의 운동, 온도, 기압, 습도 등을 물리학 방정식에 의존하여 계산하는 전통적인 기상예보 모델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정식은 매우 복잡한 기후 현상과 변화 과정을 완전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또한 기존 기후 모델의 경우 계산해야 하는 관측 자료의 방대함과 시간의 급속한 증가 및 비용의 폭등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듯 기존의 기상예보 모델로는 갈수록 잦아지고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과 업체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후예보 모델을 다수 개발했다. 한국의 초단기 강수 예측 모델인 '나우알파(NowAlpha)'나, 구글의 딥마인드(DeepMind)가 개발한 '그래프캐스트(GraphCast)'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인공지능 기상예보 모델은 위성과 레이더, 지상관측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여 계산하고 수치화하는 등 방대한 관측 자료를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한다. 또한 과거에서 현재까지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기존 모델이 간과한 신호나 미세한 패턴까지 수집, 활용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인공지능 기상예보 모델은 관측 데이터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기반으로 기후 현상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예보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학습하여 예보 오차를 스스로 줄여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활용

[마]

나날이 진화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신의 창조자인 인간, 사회의 각종 기반 시설, 복잡한 외부 세계로부터 독립하여 온갖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구조화할 줄 아는 비실체적 두뇌라는 판타지의 주인공으로 성장했다. 이를테면 우리는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어제 검색했던 장소나 사물 이미지를 화면에서 다시 만난다. 이것은 인터넷상의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여러 행동 정보, 예컨대 검색어, 머문 시간, 클릭한 기사나 영상을 바탕으로 그의 습관이나 욕망의 패턴과 흐름을 찾아내어 맞춤형 정보로 담아낸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정보 제공은 인공지능이 누군가의 내면과 개성을 충분히 고려할 줄 아는 따스한 맥락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검색하는 단어나 이미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도 그가 그것에 관심을 표하는 진정한 까닭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패턴 인식을 바탕으로 체계화할 수 없는 것을 체계화하고,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것을 규격화하며, 무한히 복잡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산술적·약호적 질서로 환원하는 장치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 상황은 인공지능이 대상물의 일부 특징을 식별하고 명명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다른 특징을 무시하거나 얼버무려왔음을 암시한다. 그럴수록 특정 정보를 선택하고 제공하는 알고리즘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관련 데이터에 대한 분류나 해석에서 왜곡과 단절, 오류와 차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미국의 한 연구진은 온라인상의 수많은 텍스트로 훈련을 받은 생성형 인공지능 언어모델인 글로브(GloVe)가 편견을 재생산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인간의 편견을 측정한 '암묵적 연관 검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암묵적 연관 검사란 피검사자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어떤 특징이나 사회적인 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와 이미지의 나열을 보면서 버튼을 눌러 모든 단어 및 이미지를 되도록 빠르게 범주화하는 검사다. 글로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들리는 이름보다는 유럽계 미국인처럼 들리는 이름을 선호했으며, 여성의 이름은 직업보다 가족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문화공동체가 축적해 온 방대한 양의 지식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의 편견을 어떤 성찰 활동이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학습하거나 굴절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글로브 언어모델은 현실 세계를 직접 조사하거나 경험하지 않고도 인간의 역사적 또는 선택적 편견을 그대로 물려받아 판단 오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활용

■ 예시 답안

인공지능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보다 공정하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강조하듯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기술이므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인간의 판단은 임의적 변동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왜냐하면 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판단자가 처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 인간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판단에는 환경과 감정 등으로 인한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어 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셋째, 제시문 (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빅 데이터에 기반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에게는 처벌과 제재를 통해 그 판단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에는 그 판단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둘째, 제시문 (다)에서 강조되듯이 인간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맥락적 해석과 공감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통합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었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해석 차원을 넘어 다양한 비언어적 특성과 복잡한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제시문 (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도 인간의 선택적 편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학습함으로써 판단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공정성에 있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우수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가치관을 고르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빅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 탁월하므로 일반대중의 의견 제시와 선택에 훨씬 개방적이다. 인공지능은 일종의 확장된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특정 엘리트 집단의 가치관에 기반한 편향적 판단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공백 포함 1,000자)

■ 채점 기준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주장의 지지 (항목당 7점)	제시문 (가)~(마)를 활용한 주장의 지지 (가)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이해관계를 배제함으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음. (나)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의 판단은 임의적 변동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취약함. (라)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빅 데이터에 기반하여 판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음.	21점
주장에 대한 반론 (항목당 7점)	제시문 (가)~(마)를 활용한 주장에 대한 반론 (가) 인간에게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인공지능은 그럴 수 없음. (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공감에 기반하여 맥락적 판단을 하는 통합적 인지 능력이 있음. (마) 인간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인간의 편견을 수용하거나 학습함으로써 판단 오류 가능성이 있음.	21점
반론에 대한 재반론 (새로운 논거의 경우 10점까지 부여)	• 인공지능은 일종의 확장된 집단지성이므로 특정 엘리트 중심의 판단보다 공정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이 로그기록으로 남아 의사결정 절차와 내용이 더욱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음. • 인공지능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지역, 개인 간의 다양한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위 재반론 외에도 창의적인 재반론을 제시하면 10점까지 부여 가능 ** 재반론에서 자신의 앞선 주장을 재기술했을 때(기존 내용의 재기술과 변형) 5점 이하 부여 예: 기술이 발전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생산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 편향성을 줄일 수 있음.	10점
글 전체의 논리성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0~8점)	8점
합계		60점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 (문항당 최대 15점까지 감점)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점수 조정 (최대 10점까지 감점)

- 500자 미만(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500자~699자: 10점 감점 / 700자~899자: 5점 감점
- 900자~1,100자: 감점 없음 / 1,100자 초과: 5점 감점

문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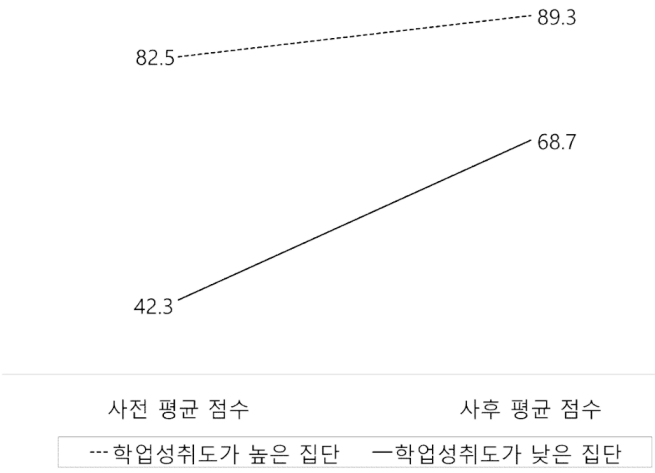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주장에 대해 (자료 1)~(자료 6)을 활용해 그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자료를 모두 활용해 반론을 제시하시오.

(600자±60자,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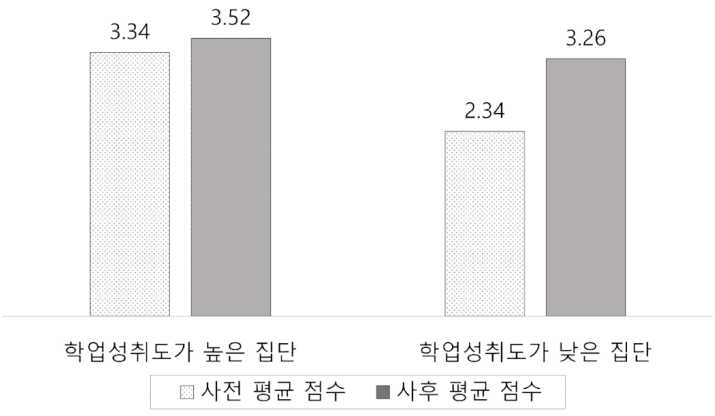
[자료 1]

A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수학 과목 학습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기를 제공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인공지능 학습기 사용 전과 후의 수학 평균 점수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그림 1> 수학 평균 점수 변화



<그림 2>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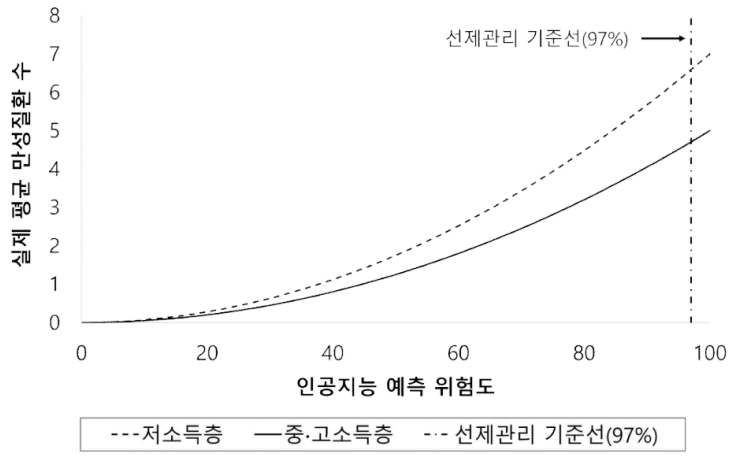


* 자기효능감: 자신이 수행하려는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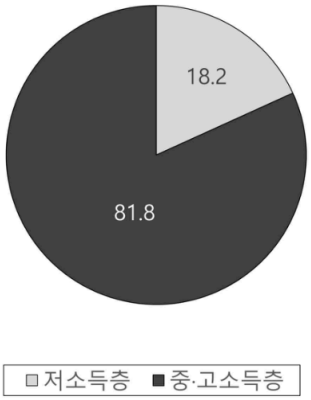
[자료 2]

A국 보건당국은 만성질환 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험군 선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의료비 지출과 진료·검진·처방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한다. 위험도가 97% 기준선을 넘으면 보건당국은 상담·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위한 선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림 3>은 소득 계층별 실제 평균 만성질환 수와 인공지능이 예측한 위험도를, <그림 4>는 선제관리 프로그램 수혜자의 소득 계층별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3> 소득 계층별 실제 평균 만성질환 수와 인공지능이 예측한 위험도(%)



<그림 4> 선제관리 프로그램 수혜자의 소득 계층별 비율(%)



* 중·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음.
* 인공지능 예측 위험도: 의료비 지출 및 의료 데이터를 종합해 산출한 개인별 질병 위험도 지표
* 선제관리 기준선(97%): 위험도가 높은 개인을 선제관리 프로그램 수혜자로 자동 연계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값

[자료 3]

A대학 연구진은 유권자용 안내 책자를 핵심만 추려 설명하고, 사용자의 추가 질문에 따라 정보를 확장하여 제공하는 상호작용형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였다. 해당 챗봇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보접근성이 다른 두 지역의 주민을 각각 1,000명씩 선정한 후, 챗봇을 활용하여 정책·쟁점 정보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표 1>은 지표별 두 지역 간 사전 점수 차이와 사후 점수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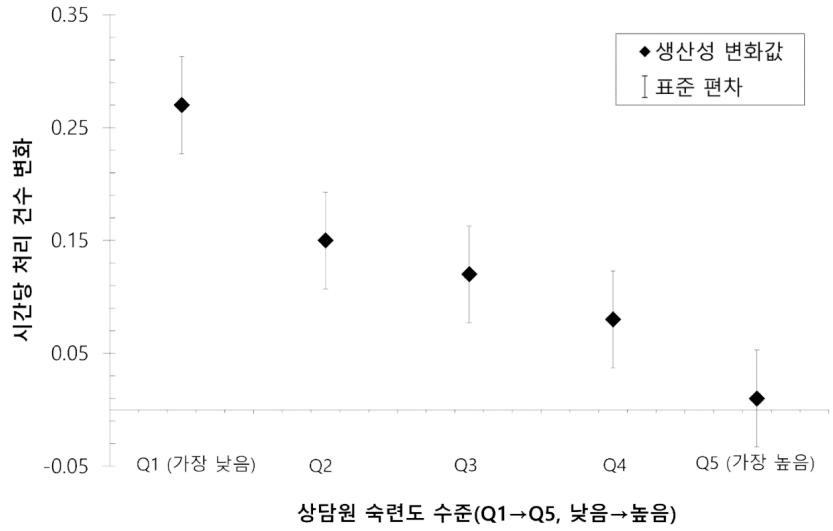
<표 1> 정보·참여 지표별 두 지역 간 사전 점수 차이와 사후 점수 차이

지표	내용	두 지역 간 사전 점수 차이	두 지역 간 사후 점수 차이
정보 이해도	정보 해석과 이해의 정확성 정도	58	11
정보 처리 시간	정보를 이해·판단하는 데 소요된 시간의 정도	−34	−6
정보 탐색 활동	추가 정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본 정도	70	23
정보 탐색 범위	추가 탐색 과정에서 확인한 정보 범위와 다양성 정도	75	17
투표 참여 의향	향후 투표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선택 확신의 정도	12	3

[자료 4]

<그림 5>는 A기업의 고객지원센터 상담원 500명의 업무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 이후 상담원의 숙련도별 시간당 처리 건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A기업은 생산성 향상분을 상담원의 인사 평가·승진·성과급 등 보상 체계에 반영하였다.

<그림 5>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숙련도별 시간당 처리 건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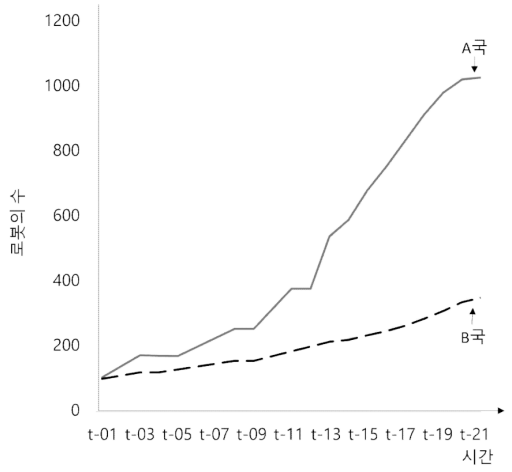


* 시간당 처리 건수 변화: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 전후 상담원이 단위 시간 동안 처리한 업무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로그값의 변화로 나타냄. 0은 변화 없음, 양수는 증가, 음수는 감소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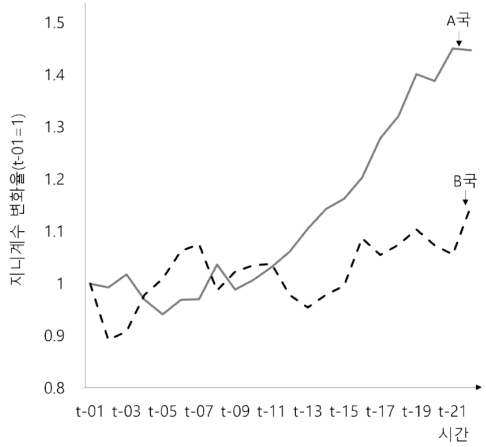
[자료 5]

<그림 6>은 시점 t-01부터 t-21까지 A국과 B국의 노동자 10,000명당 사용하는 로봇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다. 여기서 로봇은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으로 간주한다. <그림 7>은 같은 기간 이들 국가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시점 t-01을 기준(t-01=1)으로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그림 6>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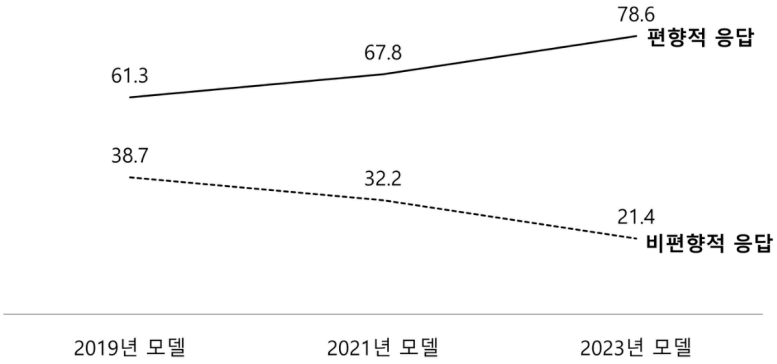
<그림 7> 지니계수 변화율



[자료 6]

<그림 8>은 A연구소에서 개발한 연도별 인공지능 챗봇 모델의 응답 편향성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다. <표 2>는 2023년 B플랫폼의 직업별 구인 광고가 남성과 여성에게 어떠한 비율로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다. B플랫폼의 광고 노출 알고리즘의 순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직업 구인 광고는 투입 예산, 광고 전략, 게재 시간, 노출 기간, 목표 대상 등 외부 변인을 통제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게시하였다.

<그림 8>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모델별 편향적 응답 비율



* 편향적 응답은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응답이고, 비편향적 응답은 고정관념에 반하는 응답임.

<표 2> 2023년 B플랫폼의 직업별 구인 광고의 성별 노출 비율(%)

직업	성별	
	남성	여성
건축 엔지니어	78.8	21.2
인공지능 엔지니어	72.8	27.2
법률가	59.2	40.8
간호사	11.8	88.2
비서	9.3	90.7
가사도우미	12.3	87.7
슈퍼마켓 점원	27.8	72.2

■ 예시 답안

(공백 포함 600자±60자)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자료 2)에 따르면 의료비 중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저소득층의 실제 건강위험도를 과소평가해, 선제관리 프로그램에서 이들을 상대적으로 배제해 소득 계층 간 의료 접근 격차를 심화시킨다. (자료 5)는 노동자 만 명당 로봇 수가 증가하는 A국이 그렇지 않은 B국에 비해 지니계수가 높아져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6)에 따르면 인공지능 챗봇 모델은 점점 편향적 응답 비율이 높아지며 이는 현실에서 성별 구직 기회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료 1)에 따르면 인공지능 활용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수학 평균 점수와 자기효능감의 격차를 완화한다. 이는 학습 격차 및 교육 내 불평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료 3)은 인공지능 기반 공공정보의 제공이 정보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치참여 의사를 향상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료 4)는 인공지능 도입 이후 고숙련 대비 저숙련 상담원의 생산성이 크게 늘고, 이러한 변화가 보상·평가 체계에 반영된 결과 숙련도 차이에 따른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줄고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백 포함 600자)

■ 채점 기준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자료당 6점씩 부여	**정당화(18점)** (자료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저소득층의 질병 부담을 과소평가해 선제관리 대상에서 배제하므로 의료 접근 격차를 심화함. (자료 5) 로봇의 수가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변화율도 높아지므로 둘 간의	36점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밀접한 관계를 나타냄. (자료 6) 인공지능 챗봇 모델은 점점 편향적 응답 비율이 높아지며 이는 현실에서 성별 구직 기회 불평등으로 나타남. **반론(18점)** (자료 1) 인공지능 활용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수학 평균 점수와 자기효능감의 격차를 완화함. (자료 3) 인공지능 기반 공공정보의 제공은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해 정치참여 의사를 향상함. (자료 4) 인공지능 도입은 숙련도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이것이 보상·평가 체계에 반영되어 임금 격차가 완화됨.	
글의 논리성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0~4점)	4점
점수		**40점**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각각 (−)15점 이상 감점할 수 없음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 — (−)10점까지

- 2번: 340자 미만(결시 아닌 백지 포함) →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340자−439자 → 10점 감점 / 440자−539자 → 5점 감점 / 540자−660자 → 감점 없음 / 660자 초과 → 5점 감점

2025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

[문항 1] (가)에서 밑줄 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른 뒤 (나)~(마)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정당화하시오(정당화에는 자신의 주장, 주장에 예상되는 반론, 이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하되, 재반론에는 자신의 앞선 주장을 재기술하지 말 것). (1,000자±100자, 60점)

[가]

오늘날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인류를 포함한 다수 생물체의 멸종을 앞당기는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은 산업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 있으며, 따라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최대한 빠르게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사회는 탄소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기에 탄소배출을 규제하자는 것은 사실상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정도와 범위가 매우 큰 기체로 배출과 동시에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특징이 있다. 온실가스의 이런 확산성으로 인해 선진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일부 국가의 감축 노력만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한 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대기 중에 축적되어 계속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온실가스의 축적성으로 인해 기후 변화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시간상으로도 서로 다르게 된다. 가령 오늘 우리가 편리한 생활방식을 누리기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과도한 탄소배출은 비가역적이면서도 전 지구적인 기후 재난을 유발하고, 그 피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저개발국가와 미래 세대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다.

유엔은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해 국가별 이해를 초월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였고, 이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COP3)와 파리기후협약(COP21)이 1997년과 2015년에 각각 채택되었다. 먼저 시작된 교토의정서는 기후 변화에 책임이 큰 주요 38개 선진국에 강제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협약이었다. 선진국에만 1990년 대비 평균 5.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 때문이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중국과 인도 등에는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미리 설정한 뒤 관련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하향식 이행을 의무로 부과했기에, 여기에 반발한 일부 선진국들은 중도에 탈퇴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파리기후협약은 참여 당사국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설정과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쉽게 전 세계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자율적 이행에 합의한 주요 당사국들인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유럽연합 등도 파리기후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기후 협정으로서는 최초로 포괄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미국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 협약만으로는 선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후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지난 30년간 머리를 맞대고 강제적이건 자율적이건 서로 간의 협력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협약 모두 기후 변화에 관한 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강제적 규제와 자율적 이행 가운데 어느 방안이 기후 변화에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사회·문화』 활용

[나]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다. 가령 가로등 불빛은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을 지닌다. 이런 성질로 인해 시장을 통한 공공재의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로등 불빛을 구매하지 않았어도 사용을 막을 수 없기에 기업이 가로등 불빛 생산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재는 복지 증진의 중요 요소이

기에 시장을 통한 공급이 어렵다고 해서 공공재의 혜택을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공동체가 나서서 공공재를 공급하고 유지해야 한다. 공동체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이에 대한 필요를 먼저 파악한 뒤, 우선 공급해야 할 항목을 선정하고,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로등 설치 요구와 노후화된 보도블록 교체 요구는 각각 가로등과 보도블록에 대한 필요로 파악된다. 이 두 공공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야간 범죄와 보도블록 파손에 의한 사고 건수를 파악하여 필요한 재화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각 구성원은 그 공급 과정에 협조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재 공급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강한 동기를 갖기 쉽다. 공공재 공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해당 공공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어떤 구성원은 이기적 동기로 협조하지 않고 그 결실만 누리려 할 수 있다. 또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사용하여도 비용을 지불한 다른 구성원이 해당 공공재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어 이기적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 외에도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신의 기여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참여를 꺼리게 될 수도 있다.

소수 구성원의 비참여는 공공재의 효과적인 공급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가 자신의 도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동기에 따라 공공재 공급 및 유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공재 공급 실패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공동체는 구성원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강제하여 그 재원으로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 이런 강제적 조치를 통해서만 공동체는 구성원의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경제』 활용

[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결과에 근거해 판단한다. 이 도덕 이론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때만 해당 행위는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된다. 밀(John Stuart Mill)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자로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밀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현실의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밀은 『여성의 종속』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요구했다. 더불어 그는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이유로 공정한 임금 책정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지지했다.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밀 사상의 중심에는 자율성이 있다. 밀은 인간 본성을 기계가 아닌 나무에 비유하면서 인간은 정해진 틀에 맞춰 작동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재된 힘에 따라 자유롭게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밀은 자율성의 토대를 국가가 앞장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에 따르면 국가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개인이 다양한 사고능력을 키우고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는 시민들이 정치적 논의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밀이 자신의 사상에서 자율성을 강조한 이유는 이 본질적인 능력이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을 위한 선택을 내릴 때 그 개인의 역량, 선호, 환경에 최적인 선택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다른 결정들보다 그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의 재능, 관심사, 경제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진로 선택은 다른 선택들보다 그 청년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다. 개인의 여건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자신이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은 외부의 명령과 강제적 복종이 아닌 당사자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실행이다. 당사자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실행할 때 그 당사자는 궁극적으로 좋은 목표를 선택할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을 것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개인의 이익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국가를 하나의 집단적 개체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유효한 주장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활용

[라]

생태주의자들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을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미래 유산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자연에 대한 이타적 생명애를 강조했다. 이타적 생명애란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비인간 존재로까지 포용과 연대를 넓혀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타적 생명애를 통해 인간에 그치지 않고 동물, 식물, 미생물, 암석, 대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를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헌신적으로 환대하는 보편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타적 생명애에 담겨 있는 타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애착 능력은 모든 것들의 터전인 지구가 파멸로 치닫는 상황을 넘어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타적 생명애를 토대로 자연과 인간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된다. 하나는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환경 재생 프로젝트다. 일례로 일본 나오시마섬 재생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섬 관계자들은 금속제련소 때문에 황폐해진 공간을 누구에게나 유익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한 미술관은 자연과 인간의 친화성 제고를 위해 자연 특유의 빛과 풍경, 인공 조형물을 한 곳에 담아내는 동시에 산의 능선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 대부분을 땅속에 배치했다.

또 다른 방식은 자연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보전하는 재야생화 프로젝트이다. 독일 에칸페르데 시민들은 북부의 풍요로운 생태환경인 비오톱을 보전하기 위해 남서부로 많은 주택과 산업시설을 이주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였다. 시민들은 본래의 자연으로 되돌아갈 지역을 정해서 풀과 나무를 심었으며, 땅속으로 매립되거나 복개된 하천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에칸페르데 시민들은 생태환경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벤처기업의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 재생 프로젝트와 재야생화 프로젝트는 해당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시간적·금전적 희생 덕분에 성공했다. 나오시마섬 주민들은 자연과의 관계를 복구하고 확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생활과 예술 작품을 자연 속에서 하나로 통합했다. 에칸페르데 시민들은 자연 친화적이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주택 건설 등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연과 풍경을 바람직한 원래의 모습으로 재야생화했다. 결과적으로 두 프로젝트가 성공했던 것은 이타적 생명애를 실천한 덕분이었다. 다시 말해 자연을 모든 것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인식해야만 대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하게 빌려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독서』 활용

[마]

코로나가 발생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급속히 증대되자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 엄격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전달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번 쓴 뒤에는 이를 안전하게 폐기해야 하며, 증상자는 집에 있건 외출을 하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은 실내에서 증상자나 환자를 돌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보균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말이 차단되므로 건강한 사람들까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창궐에 따라 생활 환경이 매우 나빠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된 긴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서구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겼던 정부 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 금지, 강제 격리 조치 등 기본권 제한을 긴급히 단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 확산 속도를 늦추고 희생자 수도 줄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의료 일선에서조차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구매 이력을 전산화하여 소수가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사태를 방지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집합 금지 및 강제 격리 조치 위반의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정부의 이런 정책들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를 방역하기 위해 모든 국민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공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이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활용

■ 예시 답안

※ 공백 포함 1,000자±100자

▮ 강제적 규제를 택한 경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강제적 방식을 지지한다. 기후 위기는 긴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 이상 각 국가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릴 수 없다. 특히 파리기후협약의 문제가 기후의 공공재적 성격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재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감축 여부를 각국의 자발적 판단에 맡기지 말고 국제 사회가 강제해야 한다.

강제적 방식을 옹호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구온난화가 긴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코로나는 인류가 직면한 긴급한 위기 상황이었다.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은 신속성과 효율성으로 이 긴급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려는 시도도 신속성과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강제적 조치의 모습을 띠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정상화된 기후가 공공재적 성격, 특히 비배제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있다. 각국은 감축 참여와 무관하게 정상화된 기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특징으로 인해 각국은 감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 할 수 있고 그 결과 인류는 감축에 실패할 수 있다. 무임승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

위 주장에 대해 혹자는 밀의 공리주의 사상을 언급하며 온난화의 위기가 더욱 확실해진 상황에서 각국은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기후 안정을 위해 스스로 탄소 감축에 참여할 것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환경 재생 프로젝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타적 생명애는 인류로 하여금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 감축에 따른 전 지구적 혜택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경제 발전을 포기하면서까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타적 생명애를 통한 국지적인 환경 재생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적용하여 기후 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국제 협약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공백 포함 998자)

▮ 자율적 이행을 택한 경우

자율적인 이행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게만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한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 위기 대응에 많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이행을 강조하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

(다)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명령이나 강제적 규제보다 자율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 참여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탄소배출 감축에서 각국이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참여한다면 자국의 상황, 역량, 환경에 맞는 최선의 목표량과 효율적인 시행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라)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타적 생명애를 통해 기후 위기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타적 생명애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돌봄 능력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연대와 환대를 발휘한다. 사람들이 자율성에 기초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 지구를 모두의 공동체적 환경으로 인식해 더욱 소중히 보전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이나 대기의 공공재적 측면에 주목하여 자율적 이행을 통해서는 모든 국가를 탄소배출 감축 노력으로 이끌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한 국가가 기후 위기 대응에 참여하지 않아도 다른 국가의 노력으로부터 나온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코로나 방역에서의 마스크 강제 착용 조치처럼 기후재난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더 나은 안전과 행복을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강제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그러나 교토의정서처럼 자발성에 기반하지 않은 강제적인 탄소배출 감축 규제는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최선의 대안은 국가 간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기후 위기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자율적인 이행을 끌어내는 것이다. 나아가 기후재난이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강제적 규제를 통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처럼 국가의 고유한 주권도 제한될 수 있기에 자율적인 이행이 바람직하다.
>
> (공백 포함 1,001자)

■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기준		배점
선택한 입장	**강제적 규제를 선택한다.**	**자율적 이행을 선택한다.**	
■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요약			
입장 선택	– 탄소배출 감축 참여 여부를 국제사회가 강제해야 함	– 탄소배출 감축 참여 여부를 국가의 자율성에 맡겨야 함	5점
■ 제시문 (나)~(마)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			
자신의 주장 정당화	– (나)의 논거 • 공공재인 기후는 비배제성을 갖고 있음 • 무임승차가 가능하여 강제로 규제하지 않으면 탄소배출 감축에 소극적으로 참여함 – (마)의 논거 • 기후 위기는 긴급한 문제임 • 코로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긴급 상황에는 강제적 조치가 효과적임	– (다)의 논거 • 자율적 판단은 최선의 선택을 가져옴 • 각국의 여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면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이익이 극대화될 것임 – (라)의 논거 • 이타적 생명애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음 • 이타적 생명애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 이행이 가능	15점
■ 제시문 (나)~(마)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제시			
주장 논거에 대한 예상 반박	**강제적 규제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자율적 이행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15점
	– (다)의 논거 • 자율적 판단은 최선의 선택을 가져옴 • 각국의 여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면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이익이 극대화될 것임 – (라)의 논거 • 이타적 생명애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음 • 이타적 생명애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 이행이 가능	– (나)의 논거 • 공공재인 기후는 비배제성을 갖고 있음 • 무임승차가 가능하여 강제로 규제하지 않으면 탄소배출 감축에 소극적으로 참여함 – (마)의 논거 • 기후 위기는 긴급한 문제임 • 코로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긴급 상황에는 강제적 조치가 효과적임	
■ 반론에서 제기된 논거에 대한 재반박			
재반박	**강제적 규제 주장에서의 재반박 논리(예시)**	**자율적 이행 주장에서의 재반박 논리(예시)**	15점
	– (나), (마)의 논거를 반복하여 이용하지 않고 (다), (라)를 논리적으로 재반박하는지를 평가 (재반박 근거의 예시) • 전 지구적 혜택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 국가가 경제 발전에 이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함 • 이타적 생명애는 전 세계에 적용하기 어려움 • 개별 국가의 단기적 이익과 지구 전체의 장기적 이익이 불일치함 ※ 재반론에서 자신의 앞선 주장을 재기술했을 때 10점 이하 부여	– (다), (라)의 논거를 반복하여 이용하지 않고 (나), (마)를 논리적으로 재반박하는지를 평가 (재반박 근거의 예시) • 강제적 협약으로는 탄소배출 감축 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긴급성을 이유로 감축 정책을 강제할 경우 각국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의 함양은 정부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할 것임 ※ 재반론에서 자신의 앞선 주장을 재기술했을 때 10점 이하 부여	
글의 논리성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점수 부과)		10점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총 10점 이내 감점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감점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문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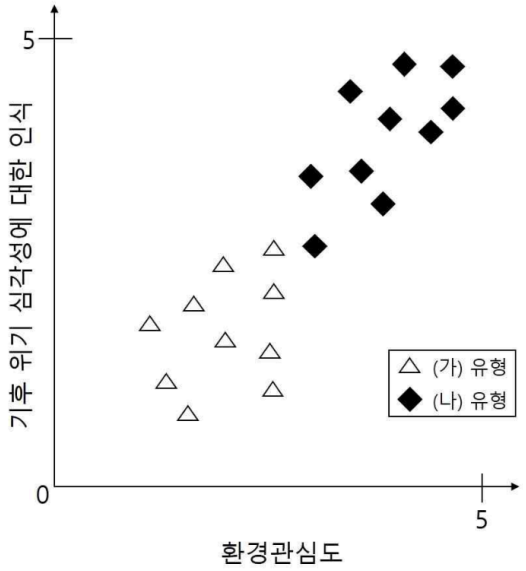
<다음>의 밑줄 친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고른 뒤, 그것이 (자료 1)의 (가) 유형과 (나)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신이 고른 입장에 대해 (자료 2)를 활용하여 그 유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자료 3)을 활용하여 그 유형의 사람들을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60자, 40점)**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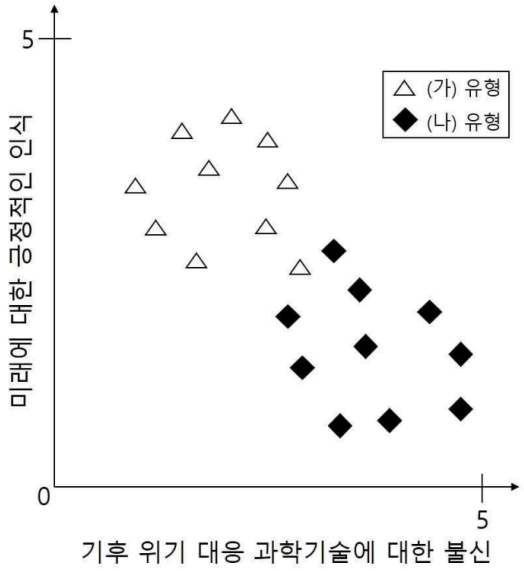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 비관론자와 기후 위기 회의론자로 나뉜다. 기후 위기 비관론자는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기후 위기는 과도한 인간 행위로 유발된 것이라 여긴다. 이들은 과학기술로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기후 위기 회의론자는 환경과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기후 변화는 자연스러운 지구 활동의 일부라 여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피해는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료 1]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두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환경관심도,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및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5'(매우 높다)부터 '1'(매우 낮다)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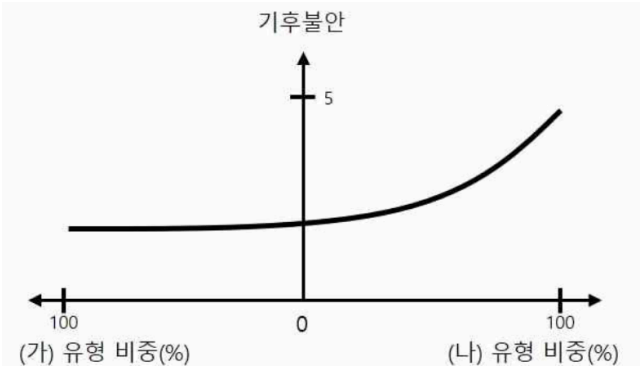
<그림 1> 환경관심도와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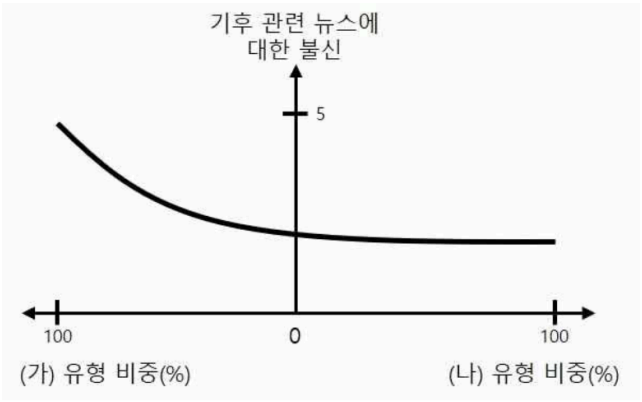
<그림 2>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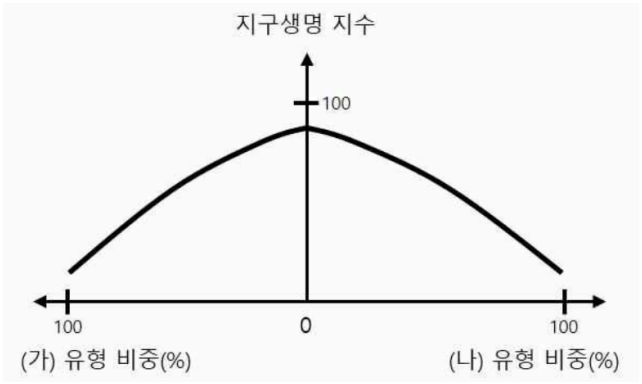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5>는 (가) 유형과 (나) 유형의 비중이 각각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을 다음 지표의 변화로 예측한 것이다. 기후불안은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 또는 무력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보도 매체가 기후 위기를 과장한다고 여기는 불신 정도를 '5'(매우 그렇다)부터 '1'(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의 값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지구생명 지수는 1970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생물 개체군의 평균 개체수를 수치화한 생물다양성 지수다.



<그림 3> 기후불안



<그림 4>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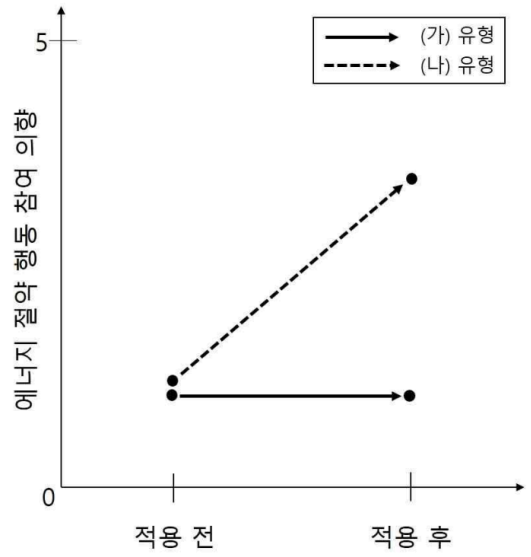
<그림 5> 지구생명 지수

[자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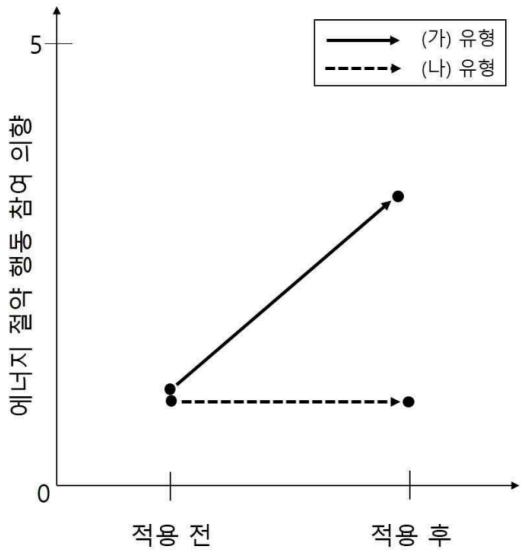
기후 변화 대응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놓고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 A 방안: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적극 홍보
- B 방안: 인간 행위가 유발하는 기후 위기 현상을 적극 홍보

<그림 6>은 (가) 유형과 (나) 유형에 속한 사람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A 방안을 적용하기 전후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을, <그림 7>은 (가) 유형과 (나) 유형에 속한 사람 중 일부를 다시 무작위로 추출하여 B 방안을 적용하기 전후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을 '5'(적극 참여하겠다)부터 '1'(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사이의 값으로 측정하여 평균한 결과다.



<그림 6> A 방안 적용 전후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



<그림 7> B 방안 적용 전후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

■ 예시 답안

※ 공백 포함 600자±60자

기후 위기 비관론자를 택한 경우

기후 위기 비관론자는 (자료 1)의 (나)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림 1>의 (나) 유형 역시 환경관심도가 높고 기후 위기 심각성이 높으므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특징과 부합한다. 또한 기후 위기 비관론자는 과학기술로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미래에 대한 인식도 비관적인데, 이는 <그림 2>의 (나) 유형에 나타난 특징과 일치한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이 높아질 때, 사회 전반의 기후불안 정도가 높아지지만, 사람들의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정도가 변함없이 낮게 유지되며, 지구생명 지수는 낮아진다. <그림 6>과 <그림 7>에 따르면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홍보하는 A 방안에서는 높아지지만, 인간 행위가 유발 요인이 되는 기후 위기 현상을 홍보하는 B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A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공백 포함 600자)

기후 위기 회의론자를 택한 경우

기후 위기 회의론자는 (자료 1)의 (가) 유형에 해당한다. (가) 유형은 <그림 1>에 따르면 환경관심도와 기후 위기 심각성이 낮으며, <그림 2>에 따르면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정도가 낮고 미래 긍정 인식 정도는 높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 위기 회의론자가 가진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낮은 심각성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와도 상응한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 따르면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사회 전체의 기후불안 정도는 변함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겠지만, 사람들의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정도가 높아지며, 지구생명 지수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다. <그림 6>과 <그림 7>에 따르면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홍보하는 A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인간 행위가 유발 요인이 되는 기후 위기 현상을 홍보하는 B 방안에서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B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공백 포함 600자)

■ 채점 기준

평가 항목	채점 기준		배점
	기후 위기 비관론자	기후 위기 회의론자	
■ 유형 선택의 근거			
유형 선택의 근거 자료	- [자료 1]에서 (나) 유형 선택 • (나) 유형은 <그림 1>에서 환경관심도 높고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높음(5점) • (나) 유형은 <그림 2>에서 기후 위기 대응 과학 기술에 대한 불신 높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낮음(5점) ※ (가) 유형을 선택하면 0점 부여	- [자료 1]에서 (가) 유형 선택 • (가) 유형은 <그림 1>에서 환경관심도 낮고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낮음(5점) • (가) 유형은 <그림 2>에서 기후 위기 대응 과학 기술에 대한 불신 낮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높음(5점) ※ (나) 유형을 선택하면 0점 부여	10점
■ 선택한 유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			
그 사회 특징의 근거 자료	- [자료 2]의 (나) 유형 분석과 해석 • <그림 3>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기후불안 정도는 증가(5점) • <그림 4>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과 관계없이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낮은 값 유지(5점) • <그림 5>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지구생명 지수는 감소(5점) ※ (가) 유형으로 잘못 선택했지만, 오른쪽 답안과 같이 (가) 유형의 특징을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10점 부여	- [자료 2]의 (가) 유형 분석과 해석 • <그림 3>에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과 관계없이 기후불안 정도는 낮은 값 유지(5점) • <그림 4>에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증가(5점) • <그림 5>에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지구생명 지수는 감소(5점) ※ (나) 유형으로 잘못 선택했지만, 왼쪽 답안과 같이 (나) 유형의 특징을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10점 부여	15점
■ 선택한 유형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참여 유도 방안의 근거 자료	- [자료 3]의 A 방안 선택과 해석 •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홍보하는 A 방안 선택(5점) •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경우 A 방안에서는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높아졌으나 B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음(5점) ※ (가) 유형으로 잘못 선택하여 B 방안을 선택했지만, 오른쪽 답안과 같이 B 방안을 선택한 근거를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5점 부여	- [자료 3]의 B 방안 선택과 해석 • 인간 행위가 유발하는 기후 위기 현상을 홍보하는 B 방안 선택(5점) •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경우 B 방안에서는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높아졌으나 A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음(5점) ※ (나) 유형으로 잘못 선택하여 A 방안을 선택했지만, 왼쪽 답안과 같이 A 방안을 선택한 근거를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5점 부여	10점
글의 논리성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5점 이내에서 점수 부과)		5점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총 10점 이내 감점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감점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5점 감점

2024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두 가지 책임론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밑줄 친 (A)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문 (나)~(마)를 모두 활용하여 정당화하시오(정당화에는 자신의 주장,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그리고 이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할 것).

※ 1,000자 ± 100자, 60점

[가]

오늘날 책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다. 어떤 것 혹은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 현실적 중요성과 필요성으로부터 책임의 당위가 저절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할 책임이 어른에게 있음은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책임의 본질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책임 개념은 지금까지 늘 자유 개념과 연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윤리학은 의지의 자유와 결정의 자유를 책임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긴다. 그러나 책임 개념은 윤리학의 역사에서 늘 자유 개념의 뒷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홀(Jann Holl)은 무엇보다도 사회 안녕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는 사회 질서가 책임의 필수 조건이라고 본다.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책임이 있다거나, 책임은 자유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미 고대 희랍의 문학과 철학에서부터 등장한다. 이와 같이 책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아직 충분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주요 논쟁은 **(A)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인가, 아닌가'**하는 점이다.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규범적 책임론'이다.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행위자가 행위를 할 때 자유로운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조건들이 있었는지에 주목한다. 객관적인 상황 조건까지 감안하여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적법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이란 규범에 부합하게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라고 본다. 즉 책임은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인간이 외부의 어떠한 강제나 방해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양심 내지 이성에 반한 행위를 결의한 것에 대한 비난이다. 나아가 인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도 바로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책임의 근거를 설명하는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이 있다. 어떤 인간의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비난·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규범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책임을 형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책임의 내용이 예방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이미 일어난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뿐만 아니라, 형벌이 달성하게 될 예방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방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행위자가 행위 시에 자유의지를 가졌는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행위자에게 다른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활용

[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생각하고 욕구한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 무엇을 하지 않고자 하는 욕구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욕구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욕구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들 때 그 욕구를 차라리 갖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이 생각으로 인해 이어지는 욕구가 바로 2차적 욕구이다. 물론 2차적 욕구에 대해 3차적 욕구를 가질 수도 있다. 욕구에 대한 중층 구조적 설명은 프랭크퍼트(Harry G. Frankfurt)의 이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프랭크퍼트의 인간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칸트 철학이 지닌 도덕 지향적인 의지 분석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그의 이론은 인간 의지에 대한 상식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다. 인간의 욕구는 다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에 대해 가장 강한 충동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데 만약 눈 앞의 물이 바닷물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이러한 욕구에 뒤따라 그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자각과 더불어 그 물을 마시지 않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것이다. 이때 처음에 일어나는 욕구는 1차적 욕구이고, 나중에 일어나는 욕구는 2차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1차적 욕구는 식욕이나 흡연, 음주 등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는 것으로써,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 충동적인 욕구 외에도 1차적 욕구를 강화나 약화, 혹은 그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2차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2차적 욕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인간은 2차적 욕구를 가질 수 있어, 단순히 1차적 욕구에 지배되지 않고 1차적 욕구를 따르거나 또는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의지에 기반한 2차적 욕구를 가진 존재만이 인격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격체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자유가 아니라 의지의 자유이다. 행위의 자유는 강제나 방해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욕구이다. 욕구의 지배하에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이 비난받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야기하는 것은 욕구인 것이다. 다만 인격체로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따를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욕구도 가지고 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상벌을 주는 이유는 이를 통해 그 학생의 행위에 영향을 주어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거나 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그 학생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어떠한 상벌도 학생을 더 좋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인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2차적 욕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활용

[다]

근래의 뇌과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다. 뇌과학은 최첨단 장비를 통해 두뇌 속을 구석구석 탐색했지만 인간 행동이 물리화학적 인과원리에 따르는 신경연결망에 묶여 있을 뿐, 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를 근거로 뇌과학자들은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도 말할 수 없고 책임을 말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을 말할 수 없는 걸까? 현대 뇌과학에 앞서 이미 두뇌이론을 제시하며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검토했던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견해를 살펴보자. 그는 1952년 발간한 『감각적 질서』에서 “자유의지 또는 정신이라는 독립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이란 물리화학적 인과율에 따르는 신경작용의 산물이고, 인간 행동도 마찬가지로 신경작용의 결과라고 인식했다. 현대 뇌과학자들은 이러한 하이에크의 이론을 두뇌과학의 효시라고 격찬하면서 자유의지도, 그에 따른 책임도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하지만 정작 하이에크 자신은 결정론을 주장하면서도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의 뇌과학자들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인간의 행동이 물리화학적 결정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책임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지적 혼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이에크는 비판한다. 그는 책임의 문제는 자유의지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자들이 책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들인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 자유는 개인적·심리적 현상을 표현하는 개념이고 인간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었다. 자유의지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에도 좌우되지 않으며 어떤 원인에 의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유의지자(free willer)’는 타인의 비난, 칭찬, 처벌 등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의지자들의 사회에서는 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지 대신에 사회적이고 법적인 범주에 속하는 행동의 자유로 대체할 것을 제시했다.

자유와 책임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 즉 사회제도와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책임 원칙은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자신의 행동이 타인들에 끼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칙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칙’, 즉 ‘사회적 규약’이다. 모든 사회 제도의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책임의 문제도 사회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책임 원칙의 기

능이다. 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가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활용

[라]

현대 법질서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주인공 지킬 박사는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실험을 위해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실험 결과 새로운 인격체인 악한 하이드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지킬 박사는 자신의 또 다른 인격 하이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 형법상 범죄자가 심신장애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심신장애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심신상실'과,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상태인 '심신미약'으로 구분된다. 심신상실자는 처벌받지 않고,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받는다.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여부는 행위자가 죄를 범할 시 심리적·신체적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인도 누구나 일시적으로 심신장애자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만취, 약물 중독, 혹은 수면 중인 경우 등이다. 그래서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한 뒤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킬 박사도 하이드가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해 약물을 주입하고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하이드와 같이 자아상, 대인관계, 정서가 불안정하여 충동적인 정신질환 상태인 경계성 인격장애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현대법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하이드의 경계성 인격장애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이드의 인격장애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며,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하이드가 되어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일종의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인격장애를 가진 것만으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게다가 하이드는 인격이 문제일 뿐 심신장애자처럼 범행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통제 불능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약물에 의해 육체적·정신적 조절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명정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범죄행위가 심신상실을 인정하여 처벌되지 않은 사례도 있을까? 1840년 빅토리아 여왕과 왕자를 해치려던 에드워드 옥스퍼드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사면된 역사적 사건이나, 최근 지인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중대한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상해행위는 인정되나 환각, 피해망상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등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 하이드는 범죄를 저지를 때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점에서도 심신상실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지킬 박사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하이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정치와 법』 활용

[마]

지금까지의 세계는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이라는 자유주의 패키지가 지배해 왔다.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외적인 힘과 우연한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우리 각자는 자유라는 요술봉을 휘둘러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다. 당신 외에는 누구도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거나 당신의 선택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기에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좋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할 자유는 중요하다고 보았다.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찾음으로써 우주에 의미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인본주의는 신 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하여 신을 밀어냈다. 로크, 흄, 볼테르 등은 신을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신보다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고 했다. 19세기 이후 인본주의자들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석양을 바라보고, 괴테를 읽고, 일기를 쓰고, 민주적 투표를 시행하는 일들을 권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자유의지가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인간뿐만 아니라 침팬지와 개, 앵무새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에서 중요한 것은 앵무새와 인간이 내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자신의 욕망을 선택할 수 있느냐이다. 진화론에 따르면 동물의 골격이나 질환 등 신체형질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 무엇을 먹고 누구와 짝지을지도 결정된다. 또 인간의 심리와 행동, 본성도, 두뇌나 유전자와 같이 타고난 생물학적 물질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가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소망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는다. 왜 나는 검은색 자동차가 아니라 빨간색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할까? 하지만 이 소망도 내 선택이 아니다. 내가 특정한 소망을 느끼는 것은 내 뇌의 생화학적 과정들이 그런 느낌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세기와 20세기에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이 통했던 이유는 나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외부 알고리즘을 실현할 과학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세기까지의 기술조건에서는 자신의 내적 목소리를 따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발달한 생명공학과 유전공학 같은 새로운 기술은 우리를 해킹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는 외부 알고리즘을 만들어 냈다. 자유의 권한은 개인들로부터 그물망처럼 얽힌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 앞으로는 인간을 자기 소망에 따라 인생을 운영하는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대신, 네트워크로 얽힌 전자 알고리즘의 관리와 인도를 받는 생화학적 집합체로 보는 데 더 익숙해질 것이다. 21세기의 구글과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전례 없는 연산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예측할 뿐 아니라, 이러한 알고리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실제로 더 큰 이득이 됨을 알려준다.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신은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인간 상상력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활용

■ 예시 답안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임'을 선택(주장 1)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을 선택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규범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충동적인 1차적 욕구를 조절하는 2차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1차적 욕구만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에 기반한 2차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이러한 2차적 욕구를 지님으로써 비로소 인격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도 2차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을 어겼기 때문이다. 둘째, 제시문 (라)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된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하고,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은 형을 면제한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현재의 법·규범은 모두 자유의지를 책임의 근거로 삼아 수립된 제도이다. 현실의 법체계에서 책임의 근거가 되는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면 인간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시문 (마)처럼,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두뇌나 유전자 등과 같이 타고난 생물학적 물질에 프로그램된 것의 결과라고 보는 진화론이나, 인간을 자유의지가 아닌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로 이해하는 유전공학·생명공학 등을 내세우며 자유의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다)에서처럼, 자유와 책임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며,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을 자유의지가 없는 생화학적 집합체로 보는 과학계 일부의 주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사회질서 유지가 책임의 근거가 된다면, 책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 처벌이 난무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유의지에 근거해야만 한다.

[1,038자]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아님'을 선택(주장 2)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을 선택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은 책임이 사회질서 유지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지가

아닌 사회적 규범에서 찾는다. 따라서 행위자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할 경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예방적 목적에서도 행위자를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이 자유의지를 책임의 근거로 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진화론은 인간의 본성뿐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행동마저도 생물학적인 물질로 프로그램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최근에 발전한 생명공학, 유전공학, 뇌과학은 인간을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생화학적 집합체로 정의한다. 이들의 발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도 물리화학적 인과율을 따르는 신경작용의 결과이기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둘째로 책임이란 개인의 행위가 인간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에 끼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의 중요한 기능은 사회질서 유지에 있기에 개개인의 행위도 그 행위의 사회적 영향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책임의 근거는 사회적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1차적인 본능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2차적 욕구가 있으며, 이런 2차적 욕구를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중요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심신장애자 처벌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과 규범도 자유의지에 기반하여 수립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들의 이타적인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본능적인 1차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을 인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근거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경우 일시적 심신장애와 같은 이유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를 남용할 수도 있어 오히려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030자]

■ 채점 기준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제시문 (가)를 활용한 입장 선택	**■ 제시문 (가)~(마)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임'을 선택(주장 1)〉** - 규범적 책임론을 선택 -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라고 주장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아님'을 선택(주장 2)〉** -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을 선택 - 인간의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	10
제시문 (나)~(마)를 활용하여 선택을 정당화	**〈주장 1〉** - (나)의 논거 · 인간은 본능적·충동적인 1차적 욕구를 조절하는 2차적 욕구를 지님 · 인간은 자유의지에 토대한 2차적 욕구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인격체가 됨 - (라)의 논거 · 심신장애자 처벌 판례에서 보듯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규범은 자유의지에 근거한 책임 위에 수립 **〈주장 2〉** - (마)의 논거 · 진화론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도 생물학적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 생명공학은 인간을 자유의지가 아닌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로 이해 - (다)의 논거 · 자유와 책임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짐 · 자유의지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책임이 부과되어야 함	15
제시문 (나)~(마)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 제시문 (나)~(마)를 활용한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주장 1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 (마)의 논거 · 진화론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도 생물학적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 생명공학은 인간을 자유의지가 아닌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로 이해 - (다)의 논거 · 자유와 책임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짐 · 자유의지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책임이 부과되어야 함 **〈주장 2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15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 (나)의 논거 · 인간은 본능적·충동적인 1차적 욕구를 조절하는 2차적 욕구를 지님 · 인간은 자유의지에 토대한 2차적 욕구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인격체가 됨 - (라)의 논거 · 심신장애자 처벌 판례에서 보듯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규범은 자유의지에 근거한 책임 위에 수립	
재반박	**■ 반론에서 제기된 논거에 대한 재반박** **〈주장 1 입장에서의 재반박 논리(예시)〉** -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논리적으로 재반박이 되는지를 평가(재반박 근거의 예시) · 인간이 생화학적 집합체라는 점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님(자기 희생, 사랑 등) · 인간의 자유의지를 책임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 처벌이 난무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함 **〈주장 2 입장에서의 재반박 논리(예시)〉** -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논리적으로 재반박이 되는지를 평가(재반박 근거의 예시) · 2차적 욕구를 인간만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 부족 · 자유의지 부족을 이유로 법적 처벌 회피 남용 사례가 많아지고 사회질서 유지에 문제 발생	10
글의 논리성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점수 부과)	10
점수		**60**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문항당 10점 이내)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10점까지)

- 500자 미만(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500자~699자: 10점 감점
- 700자~899자: 5점 감점
- 900자~1,100자: 감점 없음
- 1,100자 초과: 5점 감점

문항 2

여러분은 A국과 B국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향후 C국의 국가정책을 수립하려 한다.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모두 이용하여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의 이유와 선택한 모델의 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서술하시오(자료에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서술한 문제점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하시오. (600자±60자, 40점)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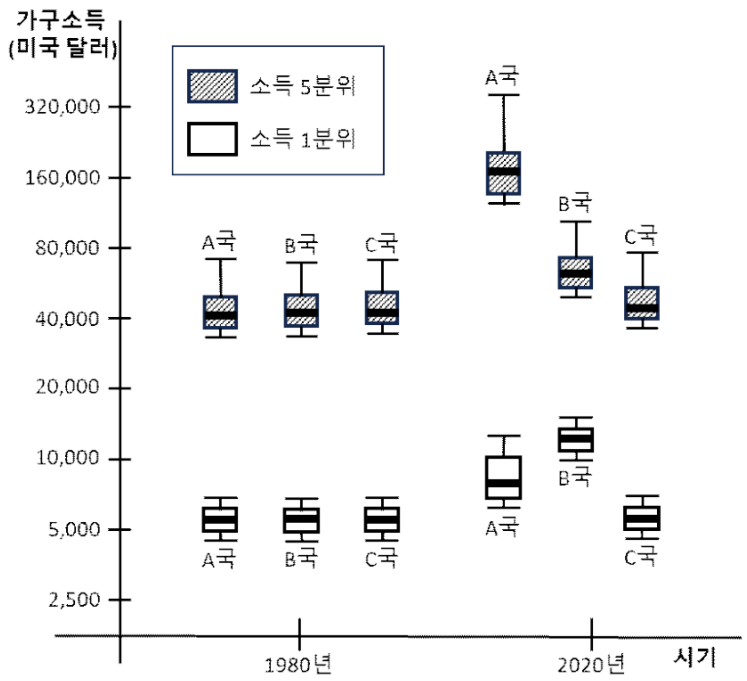
<자료 1-1>은 A, B, C 각국의 명목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산업비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한 표이다. 산업 비중은 각 산업의 부가가치를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자료 1-2>는 각국의 가구들을 5분위로 나누어 1분위(저소득층)와 5분위(고소득층)의 가구소득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자료 1-1> A, B, C국의 1인당 GDP, 산업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A국			B국			C국		
		1980년	2000년	2020년	1980년	2000년	2020년	1980년	2000년	2020년
명목 1인당 GDP (미국 달러)		13,200	28,500	35,400	13,000	28,000	34,900	12,500	13,100	13,600
산업 비중 (%)	IT 산업	10	18	20	10	11	11	5	6	6
	제조업 (IT 제외)	31	27	25	28	31	36	25	26	25
	기타 산업	59	55	55	62	58	53	70	68	69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tCO_2)		520	620	770	512	754	1,062	568	570	575

* IT 산업은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함.
*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모든 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1-2> A, B, C국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분포



* 네모 중간에 있는 굵은 선은 중위값을 의미하며, 네모의 높이는 상위 25%와 하위 25% 간의 소득 차이를 나타냄.

[자료 2]

<자료 2-1>은 소득수준과 소득격차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표이다. 2020년 60개 국가를 표본으로 하여, 소득격차와 명목 1인당 GDP에 따른 국가별 삶의 만족도를 분류했다. 명목 1인당 GDP는 25,000 달러

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소득격차는 가구소득 5분위와 1분위의 중위값 차이 100,000 달러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삶의 만족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무작위로 택하여 '현재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계산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위 30개 국가는 'H',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하위 30개 국가는 'L'로 표기했다.

<자료 2-1> 명목 1인당 GDP 및 소득격차에 따른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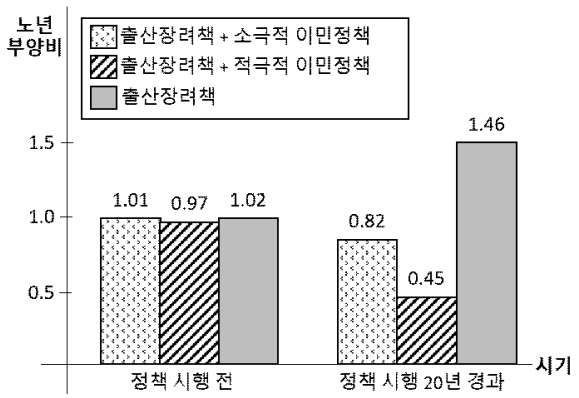
		소득격차가 큰 국가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	
		1인당 GDP가 높은 국가	1인당 GDP가 낮은 국가	1인당 GDP가 높은 국가	1인당 GDP가 낮은 국가
삶의 만족도	H	7	5	13	5
	L	8	10	2	10

[자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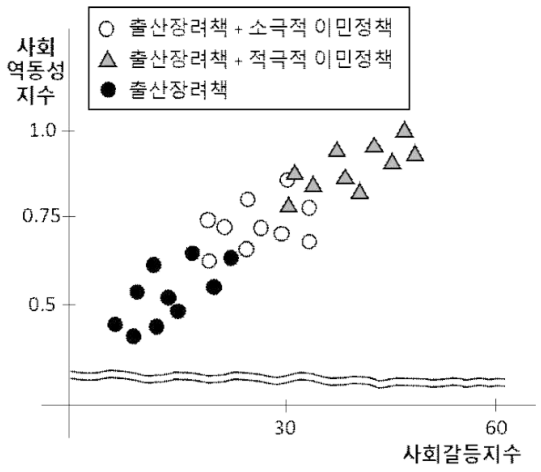
각국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1)출산장려책, (2)출산장려책 + 소극적 이민정책, (3)출산장려책 + 적극적 이민정책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A, B, C국은 현재 공통적으로 출산장려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B국은 소극적 이민정책을, A국은 적극적 이민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상 세 가지 고령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국가를 20년간 추적 조사하였다. <자료 3-1>은 각 정책을 추진한 국가 집단의 평균 노년부양비 변화를, <자료 3-2>는 정책 시행 후 같은 국가 집단별 사회갈등지수와 사회역동성지수를 나타낸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 인구수로 계산한다. 사회갈등지수는 사회구성원이 사회 내 갈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0'(낮음)부터 '100'(높음) 사이의 값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사회역동성지수는 내·외부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0'(낮음)부터 '1'(높음)까지의 값으로 나타낸다.

<자료 3-1> 고령화 대응 정책에 따른 집단별 평균 노년부양비 변화



<자료 3-2> 고령화 대응 정책 시행 후 집단별 사회갈등지수와 사회역동성지수



* 정책 시행 전 조사대상 국가들의 사회갈등지수와 사회역동성지수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예시 답안

A국 모델 선택

A국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자료 1)을 보면 A국은 IT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B국은 제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A국이 B국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천천히 증가한다. 또한, A국의 소득격차는 B국에 비해 더 커진다. (자료 2)에서 A국은 소득수준과 소득격차가 모두 높은 국가로, B국은 소득수준이 높지만 소득격

차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각국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은 각각 7/15과 13/15으로 B국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자료 3)을 보면 출산장려책+적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A국은 출산장려책+소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B국에 비해 향후 노년부양비가 낮아지고 사회역동성지수와 사회갈등지수 모두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A국 모델이 IT산업 중심의 친환경적 경제발전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역동성을 강화하면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다만, A국 모델은 B국에 비해 소득격차가 더 크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더 낮으며 사회갈등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 중 중요한 문제점인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600자]

B국 모델 선택

B국 모델이 바람직하다. 우선 <자료 1-1>에 의하면 A, B 두 국가의 명목 1인당 GDP는 비슷하게 높은 수준이지만, <자료 1-2>에 따르면 B국의 소득격차가 A국보다 작다. 또한 <자료 2-1>에 의하면,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13/15이지만,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큰 국가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7/15이므로, A국보다 B국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자료 3-2>에 의하면, 출산장려책+소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경우가 다른 정책을 취한 경우보다 사회갈등지수가 낮으므로, B국이 A국보다 사회갈등이 적을 것이다. 다만, <자료 1-1>을 보면 제조업 중심인 B국은 IT중심인 A국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 또한 <자료 3-1>과 <자료 3-2>에서 보면, B국과 같이 출산장려책+소극적 이민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A국 모델에 비해 노년부양비가 높고 사회역동성지수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B국 모델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등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607자]

■ 채점 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자료 1) ~ (자료 3) 해석</td><td colspan="2">주어진 세 자료의 해석

■ (자료 1)의 분석(10점)
- <자료 1-1> 분석
• A국: IT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B국보다 천천히 증가
• B국: 제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A국보다 빠르게 증가
- <자료 1-2> 분석: A국의 소득격차가 B국보다 커짐

■ (자료 2)의 분석과 해석(10점)
- <자료 2-1> 분석: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큰 국가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7/15이고,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13/15임
- 해석: B국이 A국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큼

■ (자료 3)의 분석과 해석(10점)
- <자료 3-1> 분석: 출산장려책+적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국가는 다른 정책을 취한 국가에 비해 노년부양비가 낮아짐
- <자료 3-2> 분석: 출산장려책+적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국가는 다른 정책을 취한 국가에 비해 사회갈등지수가 크고 사회역동성지수가 큼
- 해석: 출산장려책+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A국에서는 정책 시행 후 B국에 비해 노년부양비는 하락하고, 사회역동성과 사회갈등은 클 가능성이 큼. B국을 선택 시, 반대의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큼</td><td>30</td></tr>
<tr><td>종합 해석</td><td>A국 모델 선택

- A국 모델을 선택할 때, B국 모델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천천히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가 더 낮아지며, 사회역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음
- A국 모델을 선택할 때, 소득격차가 커지고,</td><td>B국 모델 선택

- B국 모델을 선택할 때, A국 모델에 비해 소득격차가 작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갈등이 낮음
- B국 모델을 선택할 때, A국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가</td><td>10</td></tr>
</table>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낮고, 사회갈등이 높은 문제점 발생 - 문제점 해결방안의 예시 •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소득 분배정책을 실시 •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사회갈등을 완화	더 높아지며, 사회역동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 문제점 해결방안의 예시 •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 정년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활동 인구 부담 완화	
점수			40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 (1, 2번 문항 각각 10점 이내 감점)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 ((-)10점까지)

1번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2번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5점 감점(-)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